

# 시청자미디어재단

### ❖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실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5	D <sup>0</sup>		
	(2) 기관 경영혁신	3	D <sup>0</sup>		
	(3) 국민평가 (국민체감도 평가제외)			2	1.755
	(4) 열린 혁신			1.5	1.103
	(5) 경영정보공시			1.5	1.250
	(6) 정부권장정책			6	5.337
	2. 업무효율				
	(1) 사업수행효율성			2	1.193
	(2) 시청자미디어센터 활성화 성과			2	1.911
	3.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4	D <sup>0</sup>		
	4. 재무예산관리				
	(1) 재무예산운영	3	D <sup>0</sup>		
	(2) 자구노력 이행성과	-	-		
주요 사업	(3) 재무예산성과				
	① 사업비 집행률			2	1.956
	④ 부채감축달성을			-	-
	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6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4	D <sup>+</sup>		
	1.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1)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기여도			11	10.785
	(2)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6	D <sup>0</sup>		
	2.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미디어교육 확산 성과			8	7.354
	(2)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성과관리의 적정성	5	D <sup>+</sup>		
일자리 가점	3.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1)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인방송 만족도 제고			8	8.000
	(2)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 <sup>0</sup>		
	4.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1)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5	3.838
	(2)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2	B <sup>0</sup>		
	<b>경영관리와 주요사업 합계</b>	43		52	
	1.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전사 적 노력과 전략 및 계획	3	2.400		
	2.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①-1-(a)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 상 17년 대비 실적			-	-
	①-1-(b) 기관의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한 전환의 난이도 및 목표 초과 달성을 기관의 특별한 노력	2.0	1.600		

①-2 처우개선 적절성	0.5	A		
② 정현원차 합리적 관리 및 일자리 나누기	0.5	C		
3.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2.0	B		
4.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	2.0	0.900		
<b>일자리 가점 합계</b>	<b>10</b>		-	

## 1 경영관리

### ①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 (1)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 기관은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수준 및 다양성 증대, 능동적 이용자 및 참여자로의 고객 요구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커가는 한국의 미디어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의 비전에 따라 5개 전략목표(시청자 방송참여 생태계 체계화, 보편적 미디어교육 체계 구축, 장애인 방송시청 격차해소, 시청자 권익보호 환경조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책임경영 강화), 12개 전략과제, 29개 세부과제를 설계하였다.
- 전략목표에 부합되는 전략과제, 전략과제별 세부과제 사이에 체계적인 계층 성과 세분화 하였으나, 설계된 전략목표별 중장기 계획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추진체계와 자원배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에 부합되는 성과지표가 부재한 관계로 세부과제별로 연관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모두 포함한 기관의 관리노력이 요청된다.
-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 대상기관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별도의 평가결과는 측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진행한 내부청렴도는 84.2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재단 출범 직후부터 각종 비위 의혹 보도기사들로 인해 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된 관계로 내부 직원의 기관에 대한 운영 투명성과 신뢰도 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기관의 집중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 산출된 청렴도 평가결과는 가치생산(기관, 방송사, 기업체), 가치참여(정부 부처 및 국회, 유관단체), 가치소비(시청자) 등으로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성과창출과 함께 윤리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관의 고유사업을 연계하여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및 활용, 시청자 제작단 교육 및 지원, 장애인방송 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단기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노력으로 판단되어 제도개선을 통한 신규직무 설계 또는 직접적인 일자리 확대노력이 필요하다.
- 사회공헌 활동은 특화된 사회공헌(찾아가는 나눔버스 연계교육, 미디어 센터 시설·장비 활용 극대화), 맞춤화된 사회공헌(사회적 약자 대상별 미디어 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 사회 공헌(도서(島嶼)지역 미디어 격차해소, 지역 마을 방송 협업 강화, 지역사회 미디어 센터 역할강화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규격 공개, 불공정 관행 개선, 비교견적 시행, 예정가격제도 본격운영, 표준계약서 이용 등이 진행되었으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선금 지급 활성화, 주계약자로서 중소기업 공동도급 가능, 장애인 관련기업 대상의 적합과업 발굴과 계약 등을 진행하였다.
-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12개 국정과제는 기관의 12개 전략과제들과 연결되어 열린 혁신 추진단과 공정인사 추진단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정과제와 연계된 전략과제들 사이에 정확한 논리적 연계성이 부족하고, 실제적인 구체화 정도가 미흡한 관계로 성과위주의 관리관점에서의 기관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의 사이버보안 수준(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정보보호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원보안, 사이버위기 관리, 전자정보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등 전 주기에 대한 보안관리 혁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보보호 전담자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후 보안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집중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난대비 직원 예방교육 및 시설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sup>0</sup>”로 평가한다.

## (2) 기관의 경영혁신

- 기관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을 고려한 미래 환경 시나리오를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시나리오를 기초로 미래전략 분야를 설정하였다(디지털 시민권 보장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지역거점 허브기능 강화,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 혁신적 미디어 창업자 육성).
- 미래전략 분야에 따라 14개 미래과제 후보군이 도출되었으며, 미래과제 중 중요도와 시급성을 중심으로 4개의 최우선 과제(생애 맞춤형 미디어교육 체계 확립으로 전 국민의 미디어역량 강화, 센터 추가건립 및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 운영을 통한 서비스 소외지역 최소화, 미디어교육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시청자 정보 접근성 향상,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 검증 시스템을 통한 장애인 방송품질 제고)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도출된 미래과제들은 중장기 경영전략체계와의 순차적 연결성과 부합성이 부족한 관계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청된다.
- 기관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전산화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효율화를 목적으로 센터대민업무 전산화와 그룹웨어 기반 자료공유 확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체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인사평가제도 수립에 직원참여 확대, 정책 기능 강화를 통한 선제적 전략수립을 위해 사업별 외부 자문위원회 운영, 지역 조직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소통·협력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자 간 소통활성화로 협력체가 강화노력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진행된 경영 효율화 내용은 기관의 기존 업무처리에 대한 변경이나 개선수준에 가까우며, 아울러 개선내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측정 노력도 요청된다.

-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차별 없는 보편적 미디어교육을 목적으로 미디어 복지인프라 격차 개선작업이 진행되었으며(센터가 미 설립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건립 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서비스 운영 등), 방송 소외계층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혜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추진, 민원상담 전담창구(장애인 방송민원센터) 신설을 진행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영혁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sup>0</sup>”로 평가한다.

### (3) 국민평가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 점	가중치	▣ 점
▣▣▣▣▣ 지수 +▣▣▣▣▣ 점수	목표부여	100	87.742	87.742	2	1.755

#### 나. 평가내용

-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로, 전년도 실적이 없으므로 향상도를 제외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기관별 상대등급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 조사 결과, 고객만족도는 84.742점으로, 문화(관광·예술·언론)그룹 내 상대등급(B등급) 점수 3점을 받아 최종 고객만족도지수 87.742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고객만족도 조사는 사업 영역별로 진행되어, ‘시청자방송참여를 위한 센터 운영’ 85.8점, ‘학교미디어교육’ 86.3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87.4점,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79.2점으로 평가하였다.

-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서평가에 고객만족도를 성과지표로 반영하고, 자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라. 추세분석

- 2017년에 신규 도입된 신규지표임

### (4) 열린 혁신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 점	가중치	☒ 점
▣▣▣▣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	73.5	73.5	1.5	1.103

#### 나. 평가내용

- 열린혁신 추진과 관련한 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17년도 신규 지표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공공기관 열린혁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 2017년도 행정안전부 열린혁신 평가 결과 ‘보통’ 등급으로, 평점 73.500 점, 득점 1.103점으로 평가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평가항목 중 우수한 영역은 혁신계획 수립 과정의 적절성(10점 중 7점), 혁신 과제 실행체계 구축의 적절성(5점 중 3.5점), 그 외 혁신 지원기반 마련과 관련한 정량지표 3개 항목(20점 중 18점)이며, 혁신 추진계획의 충실성(25점 중 17점)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다.
- 사회혁신 및 정부혁신 과제 총 5개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는 시민참여 과제 중 하나(7점 중 7점)였으며, 다른 1개의 시민참여 과제 및 공

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과제(각 7점 만점 중 6점씩)에 대해 그 다음으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맞춤형서비스 과제 및 일하는 방식 혁신과제(각 7점 만점 중 3점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 라. 추세분석

- 2017년에 신규 도입된 신규지표임

### (5) 경영정보공시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 점	가중치	☒ 점
▣▣▣▣▣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	83.333	83.333	1.5	1.250

#### 나. 평가내용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합 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경영공시항목을 점검 평가한 결과를 활용한다.
- 2017년 경영정보공시 점검 결과, 별점 8.5점으로 1.250점을 득점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기획재정부 일제점검 결과, 불성실공시 지적 사항은 허위공시 2건(요약대차 대조표 별점 3점, 요약손익계산서 별점 3점), 지연공시 2건(정관 및 내부규정 별점 2점), 공시변경 1건(요약대차대조표 별점 0.5점)으로 총 5건의 지적 사항이 발생하여, 총 8.5점의 별점이 부과되었다.

#### 라. 추세분석

- 공시발생 현황 점검, 담당자 교육 등 관리강화를 통해 전년 대비 벌점이 26.6점에서 8.5점으로 18.1점 감소하여, 득점 0.750점에서 1.250점으로 0.500점 상승하였다.

#### (6) 정부권장정책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 점	가중치	☒ 점
▣▣▣▣▣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	88.950	88.950	6	5.337

##### 나. 평가내용

- 법령상 의무·권장사항 및 국가주요정책사업 등 정부권장정책에 대한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소관부처의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을 산출한다.
- 청년 미취업자 고용 등 8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88.950점으로 가중치 6점 중 득점 5.337점으로 평가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중소기업·기술개발·여성기업·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녹색제품 구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항목은 만점을 달성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항목에서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1. ▣▣▣▣▣ 고용실적	1.1	100.00	1.1
2. ▣▣▣▣▣ ▣▣▣ 실적	0.5	52.50	0.263
3. ▣▣▣ 의무고용	0.5	100.00	0.500
4. ▣▣▣▣▣ 우선채용	0.3	42.50	0.128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5. □□□□□□ □□□□ 등			
- 중소기업제품	1.0	100.00	1.000
- 기술개발제품	0.2	100.00	0.200
- 여성기업제품	0.2	100.00	0.200
- □□□□□ □ □□□ □ 서비스	0.2	76.539	0.153
- □□□□□ 生산품	0.6	100.00	0.600
- □□□□□ □□□□□ 生산품	0.2	100.00	0.200
- 녹색제품	0.4	100.00	0.400
6. □□□□ □□□ □□□ 구매	0.4	100.00	0.400
7. □□□□ □□ □ □□□ □□ 실적	0.2	36.985	0.074
8. □□□□□ □□□□□ 준수	0.2	60.00	0.120
계	6	88.950	5.337

#### 라. 추세분석

- 각 세부항목별 실적관리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 첫해인 전년 평점 65.250 점 대비 23.700점이 상승한 88.950점, 득점 6점 만점 중 5.337점을 획득하였다.

## ② 업무효율

### (1) 사업수행효율성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 점	가중치	☒ 점
순사업비/ 평균인원	목표부여	▣▣▣ : 159,610,802원 ▣▣▣ : 116,080,583원	137,645,047원	59.631	2	1.193

#### 나. 평가내용

- 평균인원 대비 순사업비를 관리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유도하는 지표로, 1인당 순사업비를 목표부여 방법으로 평가한다.
- 전년대비 평균인원은 13.0% 증가한 103.7명이나 순사업비는 14,270백만 원으로 7.2% 증가에 그쳐, 1인당 사업수행효율성은 137.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5백만원 하락(5.1%)하여 평점 59.631점, 득점 2점 만점 중 1.193점으로 평가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일반관리비를 전년대비 80.5% 수준인 3,469백만원으로 감소시켰으나 신규채용 등으로 인건비가 전년 5,506백만원에서 6,362백만원으로 상승(15.5%)하고, 감가상각비가 전년 3.7백만원에서 94.4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순사업비는 954백만원 증가한 14,270백만원으로 산출하였다.

#### 라. 추세분석

- 신규 채용인원 반영(2016년 11월 12명, 2017년 12월 12명(채용형인턴의 정규직 채용)) 등으로 평균인원 전년대비 11.9명 증가(13.0%)하였다.

### (2) 시청자미디어센터 활성화성과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 점	가중치	▣ 점
▣▣ ▣▣ 연인원/ 평균인원	목표부여	▣▣▣ : 3,278.438명 ▣▣▣ : 2,384.318명	95.562	95.562	2	1.911

#### 나. 평가내용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연인원(미디어교육 수혜인원과 장비대여 이용 연

인원) 확대를 통한 기관의 업무효율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 전년대비 평균인원은 15.8% 증가한 96.3명이고 센터이용연인원은 25.5% 증가한 310,898명으로, 1인당 센터 활성화 성과는 3,229명으로 전년대비 248명 증가하여 평점 95.562점, 득점 2점 중 1.911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전년대비 미디어교육 수혜인원은 29.9% 증가한 34,437명, 방송장비대여 이용 인원은 21.6% 증가한 28,629명으로, 이용 연인원 25.4% 증가한 310,898명을 달성하였다.

※ 1년 미만 센터의 연인원은 산출 시 제외

#### 라. 추세분석

- 2017년에 신규 도입된 신규지표임

### ③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 본 기관은 기관의 중장기 전략과 그에 기반한 전략과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등이 논리적·인과적으로 설정되지 못했으며, 2017년 10월 실시된 ‘중장기 인력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또한 전략 방향에 근거해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조직 전반에 대한 목표, 과제 및 조직 체계 등이 임시적이며 다소 혼란스럽게 설정되어 이를 통해 어떻게 기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 조직목표에 부합하는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 또한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기관 설립후 연혁이 짧고, 설립 초기과정에서 기관장 부정,

채용비리와 기관차원의 방만경영 등이 노출되면서 큰 혼란을 겪어 임직원들이 이 혼란스러웠던 점은 인정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애쓴 임직원들의 노력은 인정되나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조직의 정상화와 발전방안을 위한 체계적 모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조직개편의 일반적 순서가 조직분석(직무분석) → 혁신방안 도출 → 조직개편 및 인력계획의 수립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본 기관의 경우 인력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통상적 조직혁신의 논리적 방향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활용했으며 이를 통한 성과 또한 불분명해 보인다.

- 기관의 설치법령상 핵심사업이 시청자 미디어교육과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으로 정의되고 있고 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핵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편제는 사업 목표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7개 사무소에 실무 역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전략과 기획등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양적 질적 역량(미디어교육 4인,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3인, 부서장 1인)이 담보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어 지역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는 경우 단기적 성과위주의 교육이나 프로그램 제작의 양적 의존도 심화 등 문제가 구조화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핵심사업에 조직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관 임직원 성과평가는 부서업적평가와 개인역량평가로 구성되며 양지표의 상대적 비중은 직급에 따라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어 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임직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부분의 기관이 동일·유사하다. 다만 본 기관의 경우 2017년 부서업적평가에 대해 12개 부서 가운데 7개 부서에서 8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개인역량평가에 대해서도 9명이 이의신청, 개인성과평가(부서업적+개인역량)에 대해서도 9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 공정한 성과평가와 절차적 합리성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결과에 대해 다수의 부서와 임직원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최초평가의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평가과정의 절차 공정성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특별점검 결과 ‘주의’ 처분을 받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sup>0</sup>”로 평가한다.

## ④ 재무예산관리

### (1) 재무예산운영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중장기 경영목표와 경영환경분석을 통해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총액과 총자산회전율 두 개 지표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였다. KCA 유사 기관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근 2개년 연평균 증가율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하였다. 중장기 재무계획 이행을 위해 관계 직원이 중심이 되어 재단의 특성이 반영된 중장기 재무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경영진 및 직원의 재무 인식확립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다만 중장기 재무예산 수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에 대한 회의체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재무구조의 안전성, 건전성 유지를 위해 중장기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사업공감대 확산을 통한 정부지원 확대에 추진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새정부 국정과제로 재단 사업에 선정되는 등 재단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재무위험을 정의하고, 위험관리 조직 및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개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한 관리 지표가 개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다른 최적 유동성 비율 산정 및 모니터링을 포함한 종합적인 유동성 관리체계 역시 개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15년 설립기관이며 보조금 중심 사업수행 기관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본사 임차보증금과 설립출연금(1백만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한계점으로 보조금 전액 국고 반납하고, 기부목적외 사용금지, 국유재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있다. 그러한 기관은 안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각 부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통한 회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지출을 도모하며,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임직원의 안정적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사업별 평가, 계획 및 예산 편성,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외부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재원을 다각화하고자 하였으며 기부금과 지자체 협약 등을 통해 일정 성과를 창출하였다. 다만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체 및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운영 체계가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클린카드의 사용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타 기관의 선진 운용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원가 및 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예산성과 평가체계를 변경하고 직원 교육을 시행하여 사업비 집행중심 사고에서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직원의 예산절감 의식개선을 위해 예산절감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선정작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예산 편성-집행-환류 전 과정에 걸쳐 경상비 운영 혁신을 도모하여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비가 전년대비 1,804백만원 절감된 부분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전사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타 유사기관을 벤치마킹하고 추가적은 예산 누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재무예산운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sup>0</sup>”로 평가한다.

## (2) 자구노력 이행성과

- 공운법 제39조의 2에 다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관련 지표(자구노력 이행성과, 부채감축달성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를 결측 처리

## (3) 재무예산성과

### ⓐ 사업비집행률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 점	가중치	▣ 점
사업비집행액/ 사업비예산현액	목표대실적	100	97.273	97.818	2	1.956

#### 나. 평가내용

- 재무예산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예산현액 대비 사업비집행액을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 사업비예산현액 15,256백만원 대비 집행액 14,840백만원으로 사업비집행률 97.273%, 평점 97.818점, 가중치 2점 중 득점 1.956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업예산별 세분화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예산집행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월별 예산집행 실적 현황 파악 및 각 부서별 사업 집행경과보고 등 정기적 집행실적점검과 효율적 예산운영 노력 등 지속적 노력을 통해 97.273%의 예산집행률을 달성하였다.

#### 라. 추세분석

- 사업비예산현액이 전년 12,734백만원 대비 19.8%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집행률은 1.003% 감소하였다.

#### ④ 부채감축달성도, 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공운법 제39조의 2에 다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관련 지표(자구노력 이행성과, 부채감축달성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를 결측 처리

## ⑤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1) 보수 및 복리후생

- 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방만경영정상화위원회 구성시 노동조합 및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점에 대하여 기관의 노력이 확인된다.
- 기관은 '17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17.6.) 이후 노사협의체를 통하여 성과연봉제를 운영하여 직무·능력·성과에 기반한 합리적 보수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였다. 성과연봉제를 개선하여 성과연봉의 비중을 1·2급은 기준 총 연봉 23%에서 22%, 3·4급 (21%), 5·6급(17%), 7급(6%)은 각각 비중을 달리 적용하였던 것을 17%로 통일하고, 차등 폭을 1·2급은 2배를 유지하되 3~7급은 1.1배로 완화하였다. 보수체계 개편에 대하여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고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여 부서업적 평가지표에 대하여 주관부서

회의 이후 전 직원 의견수렴 절차 및 각 부서별 실무자가 참여하는 부서업적평가추진단을 구성하여 지표별 세부평가방법을 협의하고 전 직원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하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또한 외부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는 5~7인의 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비계량지표를 평가하고, 비계량지표의 이의신청심의와 계량지표의 2차 이의신청을 심의하게 하였다.

- 개인역량평가와 개인성과평가에서는 교육·평가·인사담당자와 노조 대표 2인을 포함시킨 공정인사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직자(센터장·부장, 2·3급)에 대한 수평평가와 상향평가의 평가방식 도입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의신청에서도 이의신청 공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1심 이전에 평가자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재심절차까지 구비하였다. 그 결과 '17년 성과평가에서는 9명 중 1명의 인용 및 역량평가에서는 2명의 인용실적이 나타났다. 따라서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역량평가에서 4급 이하 직원의 평가에 있어서는 상급자와 차상급자에 의한 하향평가가 역량평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역량평가를 모두 상급자와 차상급자가 실시하는 하향평가로 구성하고 그 결과를 기본연봉, 승진에 연계하고 있어 보상과 승진에 있어서 상급자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향평가의 비중 축소, 상호평가 등의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역량평가에서 1급(실장·본부장)장에 대해서는 수평평가와 상향평가가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하위보직자와 다르게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역량평가결과의 이의신청 기간의 경우, 성과평가와 달리 5일로 짧게 규정한 것에 대한 개선과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직원, 노조 측이 참여할 수 있는 확장된 요건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공정인사추진단의 역할이 모호하여 이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현재 직급별로 2개등급(가군, 나군)으로 구분하여 직무급을 지급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직무급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직책급에 불과하므로 향후 직무급 도입을 위하여 전체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 직무분류, 직무등급평가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적으로 노조와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예산과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체육대회 지원비를 연 20만원에서 연 10만원으로 감축하여 1인당 복리후생비가 '16년에 비하여 1인당 평균 257천원이 감소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복리후생비의 적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의 경우 직원제안제도, 분기별 1회 노경협의회, 타기관을 벤치마킹하고, 경영지원부에서 비급여성 복리후생에 대하여 검토하여 발굴하고 있으며, 10개의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를 발굴·운영 중에 있다.
- 다만, 분기별로 운영되는 노경협의회의 경우 직원들의 의사수렴을 위한 채널보다는 의사결정의 장이기 때문에 On/Off-line을 보다 다양한 채널을 구축 운영하고, 방만경영정상화위원회를 전환하고, 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숙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임금피크 대상자의 성과평가를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명문화하고, 동 조항에 성과연봉제와의 연동도 명시하였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임금피크제 대상직무를 발굴하기 위하여 직무분석과 사례조사, 설문조사를 실시 3개의 직무를 선정하였다. 이에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정년퇴직 예정자 특별휴가와 관련해서는 '18년도 단체협약 개정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있어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도출된 3개의 적합직무에 대하여 1개의 직무만 개발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상세직무명세서를 전체 적합직무에 대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재단 설립 시부터 보수와 복리후생에 있어서 일반직과 계약직원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었으나, 이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계약직원 관리규칙(2016.09.07.)」 제9조제1항에 보수에 대한 차별이 없음을 명시하고, 「복리후생 운영규칙」 제2조(적용대상)에 복리후생의 차별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기관이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17년 임금상승률을 1·2급은 2%, 3급 이하는 3.5%로 차등적용하여 하후상박의 보수개선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2) 총인건비관리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 점	가중치	☒ 점
(▣▣▣ 총인건비-▣▣▣ 총인건비)/▣▣▣ 총인건비	목표부여	3.5%	▣▣ 준수 △2.270%	100	3	3.000

### 나. 평가내용

- 2017년도 총인건비 인상을 계산 대상 발생액은 4,409백만원으로 전년도 4,511백만원 대비 102백만원 하락하여 총인건비 인상을 - 2.270%으로 평가되었다.

### 다. 항목별 원인

- 정부정책의 선도적 대응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23명)으로 증원

소요인건비 조정액 1,786백만원이 발생하였다.

#### 라. 추세분석

- 2016년도는 평가에서는 2015년 5월 기관 설립으로 전년도 인건비 실적자료가 부족하여 결측 처리되었다.

### (3) 노사관계

- 기관은 노사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한 후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3대 추진전략, 6대 실행과제, 6개의 성과지표로 개편하였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하였고, 성과지표가 단편적이거나 측정이 모호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에 따라 노사협력 만족도, 노사 신뢰도 등 계량지표를 보완하여 개선하였음이 확인된다. 다만, 실행과제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교육만족도’로 측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단편적이며 해당과제에 대한 대표성도 부족하므로 성과지표 개선 등을 통해 지표를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기관장의 공석(2017.3.21.~12.25.)에도 불구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노사 상생선언문을 채택하고, 보수체계 등을 개편하였으며, 적극적인 사전 실무교섭 등을 통해 본 교섭 시작 10일 만에 정부가이드라인 내에서 임금 협약을 타결하였다. 이에 노사 협력도나 노사 신뢰도가 전년도보다 상승하였는바, 이러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사갈등예방시스템과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안에 대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노사관계의 역동성과 노사갈등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며 노사갈등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상향식, 하향식, 수평식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활발한 소통을 통해 노사 간 이해를 넓혀 노사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협력을 증진해야 함에도 소통채널이 미흡하고 소통실적도 확인되지 않으며, 소통채널 별 효과성 측정을 통한 환류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노사관계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미흡하고, 노사관계 관리역량강화와의 연계성 부족하고,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효과성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에, 전 직원 교육 1회, 노사상생+(노사담당자 2명, 노조대의원 1인 등 3명), 노무관련 단기특강(온라인) 1명 등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교육과정과 실시횟수가 여전히 미흡하며, 교육만족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만족도는 측정하나 과정별 만족도는 측정하고 있지 않는 등 지적사항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징계자에 대한 법적 분쟁시 기관이 불복하는 경우라도 15일 이내에 복직시키도록 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개선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기관의 노사가 단체협약 개정시에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7.1.1.~2018.12.31.이고 유효기간 내에서는 평화의무가 노사 양측에 있는 것이므로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해는 되지만 향후 지속적인 기관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시간변제자가 14~15명(파트타임)으로 노동부고시인원을 초과하는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을 풀타임 1명으로 개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노사협의회가 3개월 주기로 개최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년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차 노사협의회를 2017.4.20.에 개최하여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는 바, 관련

법을 준수하고 노사협의회가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sup>+</sup>”로 평가한다.

## 2 주요사업

- 기관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도와 동일하게 2017년도에도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등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 기관은 국정과제, 정부 정책에 부합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주요사업의 사업목표에 적합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또한 중장기 경영목표와의 적합성 및 경영여건과 고객ニ즈 분석을 통해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다만, 기관의 설립목적과 미션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과정을 통한 주요사업의 도출 및 성과지표 도출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해 평가 대상사업을 도출하고 2017년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추진과제를 달성을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계량지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목표부여 편차방식을 적용하여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1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 (1)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기여도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 ▣▣ ▣▣▣ ▣▣▣ 평점×0.7 + ▣▣▣▣▣▣▣▣ ▣▣ ▣▣ ▣▣▣ 평점×0.3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 점	가중치 (11)	득점
채널점유율	목표부여 (편차)	최고: 18.119 최저: 9.881	19.128	100.000	7.700	10.785
방송분량	목표부여 (편차)	최고: 15,156 최저: 6,658	14,465	93.492	3.300	

\* 단, 가중치는 해당 지표의 전체 가중치에서 각 세부지표에 할당된 가중치를 의미함

#### 나. 평가내용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작지원을 통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송채널 점유율과 방송분량을 확대함으로써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하는 상향지표이며, 세부항목별로 분리하여 평가하였다.
  - 2017년 참여프로그램 채널 점유율은 목표치 18.119% 대비 실적치 19.128%로 평점은 100.000점이며 가중치 7.7점 중 7.7점을 득점하였다. 참여프로그램 방송분량은 목표치 15,156분 대비 실적치 14,465분으로 평점은 93.492점이며 가중치 3.3점 중 3.085점을 득점하였다. 두 개의 변수 지표를 합산한 결과 평점은 98.048점이며 가중치 11점 중 10.785점을 득점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채널 점유율은 지역 방송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채널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신규채널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체채널 수 298개('17년 기준) 중 57개 채널을 지원하여 목표인 18.119% 보다 1.009%p 초과한 19.128%를 달성하였다.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분량은 제작교육 강화, 시청자 제작단 운영 확대, 원거리 지역 장비 지원 확대 등 방송분량 증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3,558분 증가하였음에도 실적치는 14,465분로 목표인 15,156분에는 미달하였다.

#### 라. 추세분석

- 채널점유율은 2012년 8.081%, 2013년 8.814%, 2014년 10.368%, 2015년 11.000%, 2016년 14.000%, 2017년 19.128%로 지속적인 상향 추세이다.
- 방송분량은 2012년 6,474분, 2013년 5,422분, 2014년 5,575분, 2015년 8,878분, 2016년 10,907분, 2017년 14,465분으로 2013년에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국정과제,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주요사업의 사업목표에 적합한 대상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장기 경영목표와의 적합성 및 경영여건과 고객ニ즈 분석을 통해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시청자 참여방송 편성 확대와 시청자 참여방송 제작 활성화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비계량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행과제의 설정 등 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실행에서 글로벌 벤치마킹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시청자의 방송 참여 생태계 체계화, 보편적 미디어교육 체계 구축, 장애인 방송시청 격차 해소, 시청자 권리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요사업의 하나로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 기관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콘텐츠를 편성·송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와 시청자 주권의 강화를 위해 방송사의 시청자참여방송 운영 지원 강화, 시청자의 참여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 기관은 방송사의 시청자참여방송 운영 지원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방송사 시청자참여방송 편성 확대 지원, 사업개선, 협업 추진, 지역 밀착형 공동체라디오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시청자의 참여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 방송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물적 지원 지원, 지역 중심 콘텐츠 제작 지원, 1인 미디어 등 새로운 방송 참여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 기관은 방송사의 시청자 참여방송 운영지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소수의 의견 등 각기 다른 주장과 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도록 시청자의 자발적 방송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마을미디어교육 지원을 통한 공동체 참여문화 확산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시청자제작단 지원을 통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경로의 시청자 방송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의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기관은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전국 시청자참여방송 편성 시간과 시청자 제작지원 콘텐츠 방영 분수라는 2개의 계량성과지표를 구성하였다.
- 기관은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방송사 지원의 효율적 관리, 신규채널 확대 노력, 시청자콘텐츠제작 인프라 구축, 미디어센터 제작지원 활성화라는 4개의 비계량지표를 구성하였다.
- 기관은 방송사의 시청자참여방송 운영 지원 강화와 시청자의 참여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는 대상사업에 대해 2개의 계량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시청자 제작지원 콘텐츠 방영 분수 성과지표가 목표에 미달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계획수립(Plan), 실행(Do), 평가(Check) 및 환류(Act)로 이어지는 자체평가 환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기 경영목표,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자체 환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PDCA에 입각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평가 시기와 평가 주체별로 모니터링을 하여 2016년도 평가결과를 활용한 2017년도 환류활동을 수행하고 2017년도 자체 평가결과를 2018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환류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정한가?

- 기관은 주요사업 계량지표를 적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기여도를 계량지표로 정의하였으며 방송채널 점유율 지표 평점, 참여프로그램 방송 분량 지표 평점을 반영하여 지표를 산정하였다.
- 기관은 계량지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목표부여 편차방식을 적용하여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D<sup>0</sup>”로 평가한다.

## ②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미디어교육 확산 성과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 점	가중치	득점
$\frac{\text{시청자미디어 } \times 0.6}{\text{ }} + \frac{\text{시청자미디어 } \times 0.4}{\text{ }}$	목표부여 (편차)	최고: 32,354 최저: 19,119	29,551	83.056	8	7.354
	목표부여	최고: 46,615 최저: 31,077	45,908	96.358		

#### 나. 평가내용

- 미디어 교육의 확산 정도와 사회·학교미디어 교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혜인원을 통한 교육의 확산 성과를 측정하는 상향(복합)지표로서, 설립 3년 이상 2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편차방식의 목표치를 부여하여 복합연인원 목표 32,354명 대비 29,551달성, 설립 3년 미만 4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목표부여방식의 목표치를 부여하고 복합연인원 목표 46,615명 대비 45,908명을 달성하였다. 각각의 평가방식별 최종 평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7.354점으로 평가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2015교육과정 개정등 교육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미디어거점학교 확대추진을 통해 학교미디어교육 연인원이 전년대비 13,274명(20.523%)이 증가하였다.
- 미디어환경변화에 따라 전 국민의 능동적 미디어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생애단계별 미디어교육 확대 추진,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 추진을 통해 사회미디어교육 연인원이 전년대비 11,146명(11.296%)이 증가하였다.

#### 라. 추세분석

- 학교미디어교육 연인원은 2012년 10,416명, 2013년 10,782명, 2014년 8,999명으로 2014년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5년 교육정책변화에 따른 학교미디어교육 수요증가 및 4개 권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설립을 통해 2015년 44,695명, 2016년 64,680으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7년은 전년 대비 20.523%증가한 77,954명으로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 사회미디어교육 연인원은 2012년 34,014명, 2013년 29,023명, 2014년 32,129명, 2015년 46,961명으로 2013년 다소 하락하였으나 미디어환경변화에 따른 미디어교육 수요증가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개관 등을 통한 사회미디어교육 확대운영을 통해 2015년 46,961명, 2016년 64,436명으로 증가세로 전환, 2017년은 전년도 대비 11.296% 증가(71,715명)의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 (2)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성과관리의 적정성

#####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국정과제,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주요사업의 사업목표에 적합한 대상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장기 경영목표와의 적합성 및 경영여건과 고객ニ즈 분석을 통해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맞춤형 교육서비스 확대, 최적의 교육 환경 조성,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비계량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행과제의 설정 등 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실행에서 글로벌 벤치마킹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시청자의 방송 참여 생태계 체계화, 보편적 미디어교육 체계 구축, 장애인 방송시청 격차 해소, 시청자 권리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요사업의 하나로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사업을 수행하였다.
- 기관은 전 국민의 미디어역량 향상을 위해 보편적 미디어교육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다각화, 교육 인프라 개선, 교육 형평성 제고라는 대상사업을 수행하였다.
- 기관은 맞춤형 교육 다각화 사업과 관련하여 생애 맞춤형 미디어교육, 커뮤니티 맞춤형 미디어교육, 이슈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교육 인프라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 미디어교육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미디어교육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교육 형평성 제고 사업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미디어서비스 확대, 미디어약자 참여 지원 강화, 추가건립 정책 지원 강화를 추진하였다.
- 기관은 주민주도형 생활미디어 제작과 운영을 위한 마을 미디어교육 지원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미디어약자에 대한 미디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미디어 지원 노력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가짜뉴스 등 디지털 사회의 위협요소에 대처하는 이슈 맞춤형 미디어교육 시행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의 적극적 추진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기관은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미디어교육 수혜자 연인원, 센터 이용자 만족도 지수, 미디어약자 참여비율이라는 3개의 계량 성과지표를 구성하였다.
- 기관은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맞춤형 교육체계 조성, 교육 인프라 증진, 미디어 격차 개선이라는 3개의 비계량지표를 구성하였다.
- 기관은 맞춤형교육 다각화, 교육 인프라 개선, 교육 형평성 제고라는 대상 사업에 대해 3개의 계량 성과지표와 3개의 비계량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대체로 적절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계량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도전성과 정량화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계획수립(Plan), 실행(Do), 평가(Check) 및 환류(Act)로 이어지는 자체평가 환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기 경영목표,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자체 환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PDCA에 입각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평가 시기와 평가 주체별로 모니터링을 하여 2016년도 평가결과를 활용한 2017년도 환류활동을 수행하고 2017년도 자체 평가결과를 2018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환류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정한가?

- 기관은 주요사업 계량지표를 적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미디어교육 확산 성과를 계량지표로 정의하였으며 학교미

디어교육 연인원, 사회미디어교육 연인원을 반영하여 지표를 산정하였다.

- 기관은 계량지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목표부여 편차방식을 적용하여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D<sup>+</sup>”로 평가한다.

### ③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 (1)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인방송 만족도 제고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 점	가중치	득점
$(\text{▣▣▣} \times 1/3) + (\text{▣} \times 1/3) + (\text{▣▣▣▣} \times 1/3)$	목표부여 (편차)	▣ : 77.987점 ▣ : 73.963점	78.100점	100.0	8	8.000

##### 나. 평가내용

- 방송 시·청취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을 목표로 장애인방송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상향지표로서, 2017년도 만족도는 78.100점으로 최고목표치인 77.987점을 초과달성하여 가중치 8점 만점을 득점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

- 지상파, 보도·종편PP의 장애인방송 양적 편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인센티브 확대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장애인방송의 품질 향상을 추진하여, 장애인방송 만족도는 전년대비 2.125점 상승하였다.
- 자막방송 만족도(78.121점)와 화면해설방송 만족도(80.664점)에 비하여 수어방송 만족도(75.515점)는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화와 방송 시간대 다양화 등의 개선사항이 도출되어 상대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라. 추세분석

- 장애인방송 만족도는 2014년도 73.6점, 2015년도 75.5점, 2016년도

75.975점, 2017년도 78.100점으로 지속적 상향 추세이며, 2017년도 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2.797%포인트 상승, 2014년도 대비 6.114%포인트 상승하였다.

## (2)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성과관리의 적정성

###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국정과제,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주요사업의 사업목표에 적합한 대상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장기 경영목표와의 적합성 및 경영여건과 고객니즈 분석을 통해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장애인방송 질적 개선,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 제공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비계량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시청자의 방송 참여 생태계 체계화, 보편적 미디어교육 체계 구축, 장애인 방송시청 격차 해소, 시청자 권리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요사업의 하나로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하였다.
- 기관은 방송소외계층 방송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제도 강화, 장애인방송 시청환경 개선이라는 대상사업을 수행하였다.
- 기관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제도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방송 제도

개선, 방송접근성 이행수단 강화, 우수사례 시범제작, 중장기 정책 수립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방송 시청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사업 홍보, 시·청각장애인용 TV 민원 처리 업무 개선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 기관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장애인방송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사회적 가치 제고에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

- 기관은 지자체 연계 등 적극적인 홍보와 편의 제공 등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시청환경 조성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장애인방송의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이에 대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기관은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인방송 만족도, 시·청각장애인용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이라는 2개의 계량 성과지표를 구성하였다.

- 기관은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소외계층 방송 접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건수, 방송접근성 이행수단 강화 정도, 방송접근 서비스 제공 수준이라는 3개의 비계량지표를 구성하였다

- 기관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제도 강화, 장애인방송 시청환경 조성이라는 대상사업에 대해 2개의 계량 성과지표와 3개의 비계량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대체로 적절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계획수립(Plan), 실행(Do), 평가(Check) 및 환류(Act)로 이어지는 자체평가 환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기 경영목표, 사업별 세부계획

을 수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자체 환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PDCA에 입각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평가 시기와 평가 주체별로 모니터링을 하여 2016년도 평가결과를 활용한 2017년도 환류활동을 수행하고 2017년도 자체 평가결과를 2018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환류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정한가?

- 기관은 주요사업 계량지표를 적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인방송 만족도 제고를 계량지표로 정의하였으며 자막방송 만족도, 수어방송 만족도, 화면해설방송 만족도를 반영하여 지표를 산정하였다.
- 기관은 계량지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목표부여 편차방식을 적용하여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sup>0</sup>”로 평가한다.

## ④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 (1)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 점	가중치	득점
$\frac{\{(전국 채널수 - 해당 채널수\} / 전국 채널수\}}{\times 100}$	목표부여 (편차)	최고: 85.983 최저: 68.771	80.984%	76.762	5	3.838

나. 평가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관련 법령 준수를 유도하여 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한 성과를 평가하는 상향지표로서, 2017년도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은 목표치인 85.983%에 4.999% 미달하여 3.838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모니터링 시스템의 양적 질적 고도화 및 광고총량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방식 변경 등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방송광고 관련 법규 및 모니터링 기준’ 등에 대한 사업자 대상 맞춤형 수시교육과 교육용 책자 발간 등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금년 준수율은 전년대비 3.607% 증가한 80.984%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이는 ‘14년 사업 수행 이후 준수율이 13.823% 상승한 것이다.

라. 추세분석

- 방송광고 법규준수율은 2014년 67.161%, 2015년 70.021%, 2016년 77.377%, 2017년 80.98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 (2)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국정과제,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주요사업의 사업목표에 적합한 대상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장기 경영목표와의 적합성 및 경영여건과 고객니즈 분석을 통해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과도한 방송광고로부터 시청권 보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비계량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시청자의 방송 참여 생태계 체계화, 보편적 미디어교육 체계 구축, 장애인 방송시청 격차 해소, 시청자 권리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요사업의 하나로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였다.
- 기관은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 활동으로 시청자 권리보호 및 상생 협력 환경조성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광고 법규준수 모니터링,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석이라는 대상사업을 수행하였다.
- 기관은 방송광고 법규준수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및 체계적 예방 활동, 사업자별 맞춤형 수시교육 실시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석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지원 조사지원 강화, TV홈쇼핑 시장의 상생환경 기반 조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 기관은 방송광고 총량 위반 사례 대폭 감소 등 방송광고 총량제의 시장 안착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TV 홈쇼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으

로 상생환경 기반 조성에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기관은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공정경쟁 정책지원 강화라는 2개의 계량 성과지표를 구성하였다.
- 기관은 방송광고 법규준수 모니터링과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분석이라는 대상사업에 대해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이라는 계량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목표에 미달하여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계획수립(Plan), 실행(Do), 평가(Check) 및 환류(Act)로 이어지는 자체평가 환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기 경영목표,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자체 환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PDCA에 입각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평가 시기와 평가 주체별로 모니터링을 하여 2016년도 평가결과를 활용한 2017년도 환류활동을 수행하고 2017년도 자체 평가결과를 2018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환류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정한가?

- 기관은 주요사업 계량지표를 적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을 계량지표로 정의하였으며 전체 사업자 채널수, 법규위반 사업자 채널수를 반영하여 지표를 산정하였다.
- 기관은 계량지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목표부여 편차방식을 적용하여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sup>0</sup>”로 평가한다.

### 3 일자리 가점

#### 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전략 및 계획

- 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파견·용역직 근로자 중심의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다.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는 근로자 대표자를 포함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총 3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한경쟁의 채용방식 및 임금체계를 협의하고, 2017년 12월 28일 예외자 4명을 제외한 파견·용역직 근로자 80명을 전환범위로 결정한 실적이 확인된다. 2017년 전환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기관은 2022년까지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중기계획 및 재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인건비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한 2022년까지의 연차별 소요예산을 파악한 실적이 확인된다. 또한 기관 내 「더 Good Job 추진단」의 구성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의 도출과 추진체계를 세분화(민간 일자리 창출 3분과, 혁신 방안 4분과)하여 구축하였으며, 중장기 로드맵과 예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확인된다. 종합하여, 기관은 네 가지 평가 요소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환과정에서 지속적인 노사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기계획서의 재원마련 방안에 있어서 정부재원 확보 외의 자구책을 포함한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②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 (1)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 ○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 기관은 2017년 10월 기준 재직 중이던 파견·용역직 근로자 84명에 대한 전환계획을 관계부처에 제출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나, 2017년 12월 28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전환 예외자 4명(한시적 업무 1명 임차시설 소속 용역 3명)을 제외한 총 8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의결한 실적이 확인된다. 이에 목표 대비 실적의 계량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측처리하였다.

▣ 분	▣ 표	▣ 적	▣ 점	가중치	▣ 점
▣ 관	79명	79명	100	1.5	1.500
평가단	0명	80명	결측	1.5	결측

- 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지침에 따라 2015년도부터 비정규직의 비율을 대폭 감소(2015년 40.38%에서 2017년 2.38%로)시켜왔으며, 2017년 5월에는 기간제 계약직 11명, 12월에는 채용형 인턴 12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이루는 정부정책의 선제적 이행 사례로써 평가된다. 또한, 정규직 전환 협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컨설팅 공모선정에 따른 컨설팅 참여가 이루어진 점, 노사상생 선언 등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기관의 바람직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 ○ 처우개선 적절성

- 기관은 2017년부터 복리후생 운영규칙을 통해 정규직 전환자나 일반직·계약직원간 동일한 복리후생제도의 시행 및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한 실적이 확인된다. 또한 간접고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복리후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후 발생하는 이윤을 활용하도록 한 점이 확인되어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육아휴직 대체 및 프로젝트 사업에 따른 비정규직 직원의 승진 및 평가를 제외하고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및 정규직 전환자의 승진, 평가, 교육훈련 제도를 동일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처우개선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직무중심의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중장기 인력운영 컨설팅을 통한 파견용역 직원의 직무조사 실시 및 협의기구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서 동일 가치 동일임금 원칙에 의거한 직무제 도입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직무중심의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을 위하여 별도 직군마련 협의 및 보수규정에 직무급제 도입을 명시하는 등의 노력은 정부의 표준 임금제를 기다리지 않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기관의 선제적인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2017년 3월부터 「복리후생 운영규칙」 제 2조 2항에 차별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실적이 확인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2) 정현원차 합리적 관리 및 일자리 나누기

- 기관은 최근 3년 동안 정현원차를 축소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7년의 경우 수시 인사위원회 개최 및 관리를 통해 현원을 충원하여 전년대비 축소한 실적이 확인되었다. 매월 재단 임직원 수 및 인사 현황을 관리·공유하고, 정현원 관련 현안 발생 시 수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현원차 관리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반면 전년대비 1인당 평균 시간외 근로수당, 1인당 연평균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 수당이 성과연봉재원으로 산입됨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어졌으나, 현원대비 인건비 총액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점이 확인되어, 장시간 근로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있는 ‘시간선택제’의 실적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나누기로 인한 재원확보 및 탄력정원에 따른 신규 채용실적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탄력정원제 도입을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③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 기관은 핵심기능에 대한 사업 및 투자를 통해서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미디어 분야 전문가 및 꿈나무 양성을 위해 계층별, 장르별 맞춤형교육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미디어교육지도사 17명, 시청자제작단 21명, 장애인방송 전문가 30명, 1인 콘텐츠 제작자 8명, 경력단절여성 강사 10명의 민간 취·창업 실적이 확인되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협력 및 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상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불만족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하는 실적이 확인되어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간 협업을 통해 ‘미디어체험 강사양성 교육’ 추진으로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실적(10명)이 확인되었으며, 시청자제작단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 창업의 연계가 이루어진 실적이 인정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하는 노력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④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

- 기관은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1인 미디어 제작시설 구축’ 등의 신규사업 발굴을 중심으로 직접 고용 및 다수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였다. 특히 ‘1인 미디어 제작시설 구축’ 사업은 인천센터 1인 미디어교육 양성과정 수료생 50%가 콘텐츠 제작 분야 취·창업을 완료하여 SBS 생활경제(17.08.08)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새로운 사업이 기관의 고유한 목적과 연관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높인 혁신적인 성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기관 내에 ‘더 Good Job 추진단’을 발족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의 수행력을 제고하였고,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영·창업 분야, 법학 및 제도개선 분야, 노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확인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정에서 기관内外부의 협력을 이룬 성과로 인정된다.